

대학, 이제는 특허확보에 발벗고 나서야



매일경제신문
이명진 기자

몇달 전 국내 한 유명 대학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대학교수인 동시에 벤처기업을 창업·운영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는 '생명공학'이다. 소위 잘나가는 분야의 학자인 동시에 사업체 CEO인 셈이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반기술로 기술이 상용화하면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론상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제약업체에까지 연결돼 임상을 거쳐 상용화됐을 때 얘기다. 그의 연구결과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과학학술지에 게재됐다.

그가 기술을 개발해 논문으로 내놓기까지 3년여 간 힘들었던 연구경험을 듣던 중 무심코 물었다.

“특허출원은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등록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네? 특허는 아직 아니구요. 일단 논문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는 게 우선이니까요. 특허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죠.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3년여의 기간을 밤잠을 안 자가며 노력해 얻은 소중한 기술자산을 특허출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논문을 통해 공개하다니, 물론 국내 대학교수, 연구자들이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다.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 것은 연구자들로서는 꿈과도 같은 일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도 사이언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져 인정받지 않았던가.

그러나 특허를 출원, 등록하면 이는 학문적인 영예에 그치지 않고 실지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CDMA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만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만약 퀄컴 기술진이 한국 대학교수들처럼 “일단 학문적인 인정을 받자. 제품화는 그 다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퀄컴에 단지 기술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냉정하다. 권리 하나 취득한 것이 나중에 수조 원 이상의 커다란 경제창출을 할 수 있다. 퀄컴은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대학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세계의 산업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으로 성장한 것이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모 교수는 “사실 대학에서는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더 명예로 친다. 교수들이 특허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이를 출원, 등록하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든다. 교수들은 이를 감당하기 보다는 학술지에 하루라도 먼저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교수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명대학들이 교수를 평가할 때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를 특허출원보다 높게

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최근 정부, 대학, 연구소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가치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표 과학자로 불리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경우 정부에서 특허를 전담해 관리해 주기까지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중 하나로 특허분야 교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넷 등 한국의 특허서비스는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해외로부터 무수한 벤치마킹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제 변해야 하는 것은 기반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체에 연결해 주는 학자, 연구자들이다. 이제 정말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눈떠야 한다. 현재 뿐 아니라 미래 국부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특허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특허전쟁 중이다. 삼성과 LG가 히타찌, 마쓰시타와 특허분쟁을 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기업들과 특허 분쟁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특허확보에 신경을 썼다면 이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떳떳하게 그들에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내 박사급 연구원 70% 이상이 모인 곳이 대학이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를 통한 권리를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충분한 숫자다. 이제는 잠재력만으로는 안 된다.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나아가 한국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자가 갖는 의무다. 

